

독자권익위원 칼럼

최충명

허그맘그린인사리상담센터
광주무등점 원장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겁다. 우리는 왜 집 값 기사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며, 왜 '내 집'이라는 단어가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낄까?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 근원적인 심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칼 융(Carl Jung)은 개인을 넘어 한 사회가 공유하는 상징과 정서를 '집단무의식'이라 정의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전쟁의 상흔, 급격한 산업화, 외환위기의 충격을 차례로 통과하며 우리에게 집은 안전의 원형이 됐다. 소유는 곧 생존이었다. 부동산 상승은 곧 존엄의 회복으로 치환될 수 있었다.

내 집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붕을 얻는 일이 아니라,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리' 혹은 '뿌리'를 확보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렇기에 집값의

부동산은 왜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이 됐는가

등락은 자산의 변동이 아니라 자아 안정의 흔들림으로 체험된다. 정부의 규제는 정책적 조정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보호막에 균열을 내는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의 기반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경제정책인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박힌 '안전=부동산'이라는 상징을 전환하려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등식은 쉽게 해체되지 않는다. 무의식은 논리보다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그만큼 굳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부동산을 거주 의 기반으로 온전히 바꿔내려는 제대로 된 시도조차 드물었기에, 우리는 더욱 부동산에 매달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심리학적으로 안정감은 예측 가능성과 통제감에서 비롯된다. 내일이 오늘과 완전히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나의 노력과 결과가 정당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안정된 고용, 신뢰할 수 있는 연금과 의료, 그리고 과도한 경쟁에 잠식되지 않는 교육 구조는 개인의 미래 불안을 낮춘다. 안전이 제도 속에 분산될 때, 사람들은 특정 자산 하나에 운명을 걸지 않고 울인하지 않으며, 삶에 여유가 생긴다.

한국 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 세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

첫째, 일의 안정성과 직업 정체성의 회복이다. 일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적 인정의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집값이 아니라 직업적·사회적인 나의 역할에서 형성된다.

둘째, 공정성에 대한 신뢰다. 노력과 보상이 연결된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으면 사람들은 '단번의 도약'을 노리는 투기 대신 '지속 가능한 과정'을 선택하게 된다. 셋째, 관계와 공동체의 복원이다. 연결된 개인은 고립된 개인보다 불만에 덜 휘둘리며, 공동체적 지지는 그 자체로 강력한 심리적 완충지대가 된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에는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집을 통해 안전을 사려 했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은 반드시 소유에서만 오지 않는다. 제도적 신뢰, 예측 가능한 삶의 구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망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집단무의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체를 의식하는 순간, 상징은 조금씩 이동한다.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 진정한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는 마음도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이제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집을 가졌는가?"라는 질문 대신 "나는 안전한가?"라고 말이다. 그 질문의 전환이야말로 정책을 넘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다.

기고

최진영

㈜영성 대표



기술이 사회의 질문을 만날 때, 창업은 시작된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교육과 의료, 그리고 현장의 여러 주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였다.

그때부터 창업의 의미도 달라졌다. 기술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붙잡는 일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창업을 '도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창업가의 일상은 대부분 버티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기술이 완성되기까지의 긴 시간, 시장이 이해하기까지의 기다림,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수정의 과정. 창업가는 결국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버티는 시간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회의 질문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 반대로 작은 기술이라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문제와 만난다면 그 기술은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

지역에서 창업을 하며 더욱 크게 느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지역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의료 접근성, 교육 격차, 돌봄 공백, 고령화 문제까지. 기술이 닿지 못한 영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지역은 오히려 기술 창업자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기술을 이해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제도가 기술을 따라오기까지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서 창업가는 끊임없이 질문받는다. 정말 필요한 기술이 맞는지,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말이다.

그 질문들 앞에서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창업가는 많지 않다. 그래서 창업은 결국 자신보다 책임이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면, 누군가는 그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업가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 역시 거창한 순간에서 탄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문제를 오래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기술은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사회는 그 변화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창업은 맛있는 일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일이다. 기술을 만든다는 책임,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책임,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책임이다. 이 책임의 시간이 쌓일 때 비로소 기술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된다.

창업을 세상에 단번에 바꾸는 일이 아니다. 어떤 문제를 오래 바라보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창업은 화려한 순간보다 조용한 시간이 훨씬 길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기술은 사람을 만나고, 문제는 해답을 만나며,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창업가는 결국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던진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독자투고

개학기 어린이 등굣길, 관심 필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아이들에게 설렘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어린이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식은 급물살이다. 특히 개학 초기에는 어린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광주 광산경찰은 개학기를 맞아 3월 3일부터 13일 까지 어린이 등굣길 집중 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학원가 일대에 112순찰차와 아동안전 지킴이를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물을 나눠주며 보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안내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굣길이 안전한 길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함께하길 바란다. 경찰 역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석 광주광산경찰서 율곡지구대 순경

취재수첩

6·3 지선, 정책 경쟁의 장 되길

이산하

정치부 차장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여는 패자택 치러오던 4년 주기로 치러온 행사와 다르다. 1986년 분리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 담론이 현실화되는 역사적 국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다. SI와 에너지 산업 전환,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다.

때문에 통합 이후 지역을 이끌어갈 수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미래가 단체장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후보들이 내미는 명함의 무게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야 한다. 지역발전 위한 구상을 제시하는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중요하다.

단순히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겠다'는 구태의연한 약속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통합 이후의 산업 배치, 인프라 확충, 인구 소멸 대응 등을 누가 더 정교하게 설계해 유권자 앞에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다. 그 험난한 길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의 화려한 이력보다 그들이 쥐고 있는 '통합 설계도'를 현미경처럼 살펴야 한다.

이번 선거가 '통합'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은 정치적 쟁점의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인지. 해답은 결국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공약과 시·도민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다.

사설

중동발 유가 급등 피해 비상, 대책마련 절실

'중동발' 유가 급등에 지역 주력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란이 세계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기폭제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전남 대표산업들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악화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계는 이번 사태로 중동의 원유 수입이 막히면서, '실상가상'상태까지 됐다. 연간 228만톤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는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이미 가동률을 60%대로 조정한 데 이어 최근 고객사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이는 자연재해·전쟁·경제 불만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료·물류·공급망이 통제 불가능하게 어려워져 계약 이행이 곤란해질 때, 위약금·손해배상 등을 면제받거나 이행을 연기·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즉, 에틸렌은 원유를 정제한 나프타로 만들어지는데 이렇듯 원유가 끊어지면 원유도 도약이 크게 지연되자 제품 공급이 어렵겠다고 통보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가동률 60%대인 LG화학 역시 사태 장기화 시 연간 생산량 80만t 규모의 2공장 가동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국내 공급 수입 나프타의 58%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라스틱과 포장재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인 에틸렌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데 있다. 이 경우 국내 석유화학 제품 산업 공급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미 나프타 가격과 해상 운임이 급등해 대체 공급선 찾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 주력산업인 자동차의 경우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사태 장기화될 경우 운송 단가 폭등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지역 수출 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해상 운임은 물론 항공·내륙 운송비까지 동시에 끌어올려 전반적인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와 긴급 금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 이들 중동발 변수를 극복할 수 있게 공적 지원 체계도 철저히 구축,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중해 프로젝트' 중대재해 예방 기여하길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해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사업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광주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인 '지중해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기로 한 것이다. 광주경총은 이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안전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기존 산업안전 정책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어려웠던 현장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해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밀폐 공간 작업, 추락 등 사고 다발 분야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공동관리자 운영과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능력 향상도 도모한다고 한다.

사실 중대재해는 그동안 대기업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하청·지역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도·점검만으로 이들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지자체는 이들 사업장 특성을 알고 있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개입 권한이 없고 재원이 부족해 제한적인 역할만 해 왔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담당하고 지방은 현장 집행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그동안 중앙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공식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광주경총은 이 프로젝트가 현장에 안착될 경우 소규모·취약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가 눈에 띄게 줄어 사고 건수와 사망자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촉촉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향후 산업안전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